

토 론 요 지 2

최 진 하(충남도청 정책특보)

1. 지방분권 평가

김('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 정착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수준이 69.7%에 이르나 지방분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6%정도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헌법규정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대한민국 헌법8조에 지방자치 규정이 포함되어있음, 그러나 자치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정도로 표현되고 있음. 또한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균형발전 조항이 포함된 정도임
따라서 헌법에 분권에 관한 명확한 명제와 의제를 담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개념으로 광역 및 지자체 단위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연동하여 연구대상인 자치입법권 확대에 관한 조례(광역시도이하)의 지위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의미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견의 66%가 조례의 법적지위를 상향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지방재정 자율성

참여정부를 거쳐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중에서 자치행정권이 우선적으로 이양되었는데 진척정도를 보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악화되었음

지방사무의 비중은 '94년 25%에서 '02년 28.2%로 증가하지만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07년도에는 27%로 오히려 감소, 자치분권의 물적 토대가 될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과세자치권을 비롯, 세입자율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전국 지방평균재정자립도 '00년 59.4%→'10년 52.5% 7.2%로 하향

따라서 분권과 균형을 담보한 연대의 원리에 부합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제도 도입 추진 필요

-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용 재산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환원 요구 필요
-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의 후퇴, 감세, 종부세의 축소로 지방재정 건전성의 1차위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완해야함
- → 재정분권과 포괄보조금이 실천적으로 가능한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

3.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마련 필요

- 분권과 자치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을 통해 의식전환과 공공성에 기반한 시민의식 개혁 필요

4. 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1) 근린단위 커뮤니티 형성
 - 임기응변식 도시개발구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수립 실행
- 2) 충남의 경우 서북부권역과 서남부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 각종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 마을환경 조성추진
- 3) 근린단위의 마을에 관한 중요한 계획과 결정을 거버넌스 형태의 주민자치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
 -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체계조직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도 단위 지원기관 등의 활용 필요

5. 결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제 대한 의식과 지방분권과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조례지위의 적절성, 자치경찰제, 재정자율성, 교육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정부입법참여, 단층제 체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포함한 충남형 기초조직인 근린자치제도 혹은 근린자치마을 구성에 대해 연계성과 부합성에 대해 논의가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전병유(2011), 지방분권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분권자치형 국가발전모델 연구-
2. 최병선, 김선혁(200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3. 조명래(2009), '과천시 도시정비의 쟁점과 올바른 방향' 과천시민토론회 발제문